

# 법대로... 상임위도 구성될까

### 21대 국회 개원... 통합당, 참석후 의장단 선거 불참 민주당, 국회의장 박병석·부의장 김상희 의원 선출

21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 갈등 속에서 파행이 불가피 해 보인다. 특히 지난 5일 국회법에 따른 정식 개원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개원 강행에 반대하며 의장단 선거를 보이콧하면서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의장단 선출이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이뤄진 것은 국회 개원과 의장단 선출 시한을 명문화한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첫 본회의의 파행을 두고 민주당은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개원"으로 서로를 몰아세우며 치열한 대치를 예고했다.

국회는 지난 5일 오전 10시 여야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첫 본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 파행 등을 이유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 직후 퇴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6월 5일 첫 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게 돼 있는 규정의 의무 조항이 아닌 훈시 조항이라며 "여야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늘 회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20차례 개원 국회 중 1967년 7월 10일 단 한차례만 단독 개원이 있었다"며 이날 본회의가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개원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본회의의 개최는 국회법과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못 연다는 것은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또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된 과거의 잘못된 국회를 21대 국회에선 단호히 허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의장단 선출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여권 정당과 국민의당이 참여했다. 통합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의부의장에는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다. 통합당 몫 부의장은 정진석 의원이 내정됐지만 통합당의 표결 불참으로 선출이 미뤄졌다.

21대 국회 첫 본회의는 의장 후보 다음 최다선 연장자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으며, 의장 선출 후에는 박병석 신임 의장이 의사봉을 넘겨 받았다.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1표를 얻어 당선됐다. 투표 참가자는 총 193명이었다. 박 의장은 "아쉬움 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는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다. 의장 선출 직후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아산 출신 복기완(52) 전 의원을 임명했다. 복 실장은 고려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재선 아산시장과 청와대 정부비서관을 지냈다.

국회 개원이 파행을 빚으면서 개원식은 개최되지 않고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개원식이 열릴 경우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연설도 순연됐다.

한편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악이라 평가받는



박병석 의장·김상희 부의장 당선 인사.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에 선출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당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의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일하는 국회 체제를 만들어서 협력의 정치를 21대 국회에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비판을 하더라도 협력의 정치를 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두관 “대북 전단살포는 반헌법적 망동”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북 전단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에 맞춰 입법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두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소동이

자 헌법에 정한 평화통일 정신을 거역한 반헌법적 망동"이라면서 "정부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조속히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최소한 그 정도의 의지는 보여야 그나마 남북군사합의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대선·지선 동시 실시, 비용 절감 효과 없다

### 선거비 1534억 절감 되지만 보전비용 1500억 늘어

2022년 6월 지방선거 일을 그해 3월 대선으로 앞당겨 동시에 실시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정대로 대선을 3월 그리고 지방선거를 6월에 따로 치를 때 선거 투개표와 홍보 등에 드는 선거관리 비용은 1조4160억원(대선 3474억원, 지방선거 1조686억원)으로 추산됐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3월에 동시에 치른다고 가정하면, 선거관리 비용은 총 1조2626억원(대선 2949억원, 지방선거

9677억원)으로 1534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 보전비용은 오히려 15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전비용이란 선거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운동 경비를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따라 국가에서 사후에 갚아주는 돈이다.

대선과 지선의 동시 실시에 보전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선거법상 14일인 지선 운동기간이 23일인 대선에 맞춰 9일 늘어나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민주당 광주시당신임 사무처장에 김유승 씨

더불어민주당은 정기인사를 통해 광주시당 신임 사무처장으로 김유승(47) 중앙당 원내의사국 부국장을 임명했다. 7일 밝혔다.

전남 강진 출신인 김 신임 사무처장은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공보국장 겸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민주당 공보국 부서

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당과 국회의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당조직을 새롭게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선일 전남 광주시당 사무처장은 민주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원일 기자 cki@

## 여의도 브리핑

## 조오섭 '전두환 배제' 국가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사료 세우기 8법 중 하나로 조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법안이다.

로 사후 국가장의 예우를 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전두환씨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범죄자로 사면, 복권

과 무관하게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송갑석, 서삼석, 김승남, 김희재, 민형배, 신정훈, 양항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민, 이형석, 인제근, 주철현, 진성준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초대 공수처장 누구... 후보추천으로 관심 증폭

### 변협, 이르면 오늘 후보 확정해 국회 추천위 전달

'거대여당'이 주도하는 21대 국회 개원을 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공수처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범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초대 공수처장 인선 작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조만간 상임이사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해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추천할 후보자 수나 추천 시한 등은 정

해져 있지 않지만, 공수처 출범이 다음 달 15일이니 상임이사회가 매 주 1차례씩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8일 추천 후보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법정단체인 데다 협회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맡고 있어 이번 후보 추천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이 각각 위원을 맡고, 여기에 여야가 각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

천할 수 있다.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처장의 임명이 완료된다.

공수처장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다 정치 중립성이 요구돼 적합한 인물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에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년은 65세다. 따라서 65세를 넘은 사람은 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안 된다.

아울러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자연히 현역 검사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

수처장 후보군에 오를 수 없다. 당장 퇴직해도 2~3년 뒤에나 자격을 얻는다.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들 가운데 초대 공수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는 이광범(61·연수원 13기) 법무법인 엘케이비엔 파트너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백승현(57·15기) 법무법인 경 변호사, 김진국(57·19기) 감사원 감사위원, 김남준(57·22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민변이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단체인 만큼 역시 정치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58·16기) 고려대 교수가 거론됐지만, 그는 언론을 통해 고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